



동남권 관문공항 보고회

숨 가쁘게 달려온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1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출범한 신공항시민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올해 4월 18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을 두고 국무총리실 최종 검증을 합의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인사에 국한된 기존 시민추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 인사뿐 아니라 이재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수도권 전문가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을 합류시켰다.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조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민간 부문 컨트롤 타워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민토론회를 열어 김해신공항 확장안 문제점과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김정호 단장(더불어



1



2

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부산지역 12개 구·군을 돌며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 소음, 환경, 미래수요 측면에서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대규모 시민 행사인 '2019 슬로우 워킹 페스티벌'과 '시민음악회'를 열어 지역 숙원사업인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시민 역량을 결집했다. 이 밖에 TV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 캠페인과 칼럼, 인터뷰 등 인쇄 매체를 활용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추진위원회 상임공동의장을 맡은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점

을 건의했다. 11월 초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허 상임공동의장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100대 기업 본사 91%와 1천대 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결국 나머지 국토의 88%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경제적 분석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은 동북아 해양수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❶



3



4